

# ‘적발보다는 예방’… 확 달라진 선거법 단속

전남도 선관위, 사전 모니터링 256건 위법 차단

군수 축사 등 행사 현장서 27건 중단 시키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이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에 위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위주로 변하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리위는 하반기의 경우 95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56건을, 상반기에는 915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127건의 위법행위를 차단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40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위법행위 소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선관위는 윤리위(2월1일~6월30일)와 하반기(7월1일~9월30일)를 상반기(2월1일~6월30일)와 하반기(7월1일~9월30일)로 분석된다.

주요 사전 시정건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금품제공 수반사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상 및 포상 표창 47건 ▲홍보물 발행 34건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금품제공 12건 ▲의정활동 보고 7건 ▲광고 출연 5건 ▲연우순시 2건 등이었다.

금품제공 수반사업의 경우 법령 등의 근거 없이 모범음식점에 입식 테이블을 제공하거나, 법령 등의 범위에 벗어나 수학여행 경비 지원, 쓰레기 종량제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가 주요 시정 대상이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향우회 행사에 화환을 제공하고, 모 단

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군수, 지방의원 명의의 효행상 등 시상식 때 부상을 수여하거나 모 축구대회 우승 트로피에 의장 성명을 게재한 행위, 연우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등도 이번 모니터링에서 시정조치 됐다.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 현장 등에서 중단시킨 건수도 총 27건에 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협약 없이 관내 조합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와 군수의 라디오 광고 출연 행위 등이 있었다.

전남 선관위의 행·의정 모니터링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연우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 수반사업 등 7개 분야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은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하고 예방활동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손도장 대형 태극기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대형 태극기 위에서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날은 독도 관련 대한제국 칙령이 1900년 10월 25일 제정된 것을 기념해 독도수호대가 지난 2000년 처음 제안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9세기 日 발행 지도에 동해→‘조선해’ 표기 확인

### 안행부, 독도 고지도 복원 공개

19세기 일본이 직접 발행한 지도에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목판본 조선전도에서는 독도를 ‘우산국’으로 명시했다.

안행정부 국가기록원은 25일 독

도의 날을 맞아 독도, 동해와 관련된 고(古)지도를 복원·복제해 24일 공개했다.

1844년 일본이 발행한 고지도인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는 세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했다. 이 지도는 19세기 최고의 일본

인 학자인 미쓰코리 쇼고(箕作省吾)가 프랑스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지도는 일본 동쪽 바다는 ‘대일본해’로, 태평양은 ‘대동양’으로 각각 표기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당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고지도는 이번에 복원된 신제여지전도 외에도 지구만국산해 여지전도(1785년), 신정만국전도(1810년), 여지유래(1835년), 지구만국방도(1853년) 등이 있다. /연합뉴스

##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균생용지/ 접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애셋코리아**  
since 2005

##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 광주소유 건물: 2353㎡

감정가격: 21억6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 800㎡ 건물: 4834㎡

감정가격: 69억3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 3238㎡ 건물: 3090㎡

감정가격: 89억7천 채권매각: 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증인 물건을 유동화 자본매각 전문회사인 애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양 사무실)

## 금당공인중개사

###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투자·감정가 이하

- 총길이 5가 버스도로 대지 777㎡(235) 공시지가 17억7천만 원피스텔, 상기개발적합 9억6천
- 합평군 영월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 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적합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원룸·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 1억6천
- 개림동 구호빌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원·한의원·사옥등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 앞 동평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등 건물4동 대지 321평 건물 592평 고시원 176실 전 세 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낙평을 비행장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94평

####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기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오피트, 증도에 솔로몬타운 웰도라도 가는 길. 비단가가 보이는 별장용 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기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 167㎡(50) 전 세 5천에 월 200만원. 분위기 있는 상당도 적합
- 임대·매매. 생활동에 신축증인 기도건설의 기도생활주택 2채 건물 허가금 90평. 주거. 입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서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활동(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시장·군수·구청장 159명

### 강원 평창서 성명서 발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24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5기 4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 공천 때문에 주민선택권 외곡, 지방의 중앙정치 애속, 영유아 보육 사업의 정상주진을 위해 국고보조를 10%를 20% 까지 올리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공천제 폐지를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

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당론 체택을 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조속히 확정하고, 민주당 또한 공천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취득세 영구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현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인상한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 사업의 정상주진을 위해 국고보조를 10%를 20% 까지 올리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총회에는 159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법 개정 촉구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라며 “그간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검증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상위법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거나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北 “억류 남한 주민 6명 25일 돌려보낼 것”

### 남측에 통보·입북 경위 피와 안돼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오늘 오전에 조선적십자사 종양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내일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돌려보내겠다는 6명의 신원이나 자진북부 여부 등 정확한 입북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0년 2월 26일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이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려 차례 이들의 신원수수를 위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북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늦었지만 북한이 지금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6명의 신원사항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쳐 이들의 신원을 인수한 뒤 관계기관과 함께 입국 경위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군원시설입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

▷동구 지사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 241㎡ 건평307㎡  
김정기4억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 1760㎡ 건평 2821㎡ 김정기4억6천 최저가26억

▷니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 545㎡ 건평 2309㎡ 김정기1억3천 최저가7억

### 단독주택

▷북구 장들동 전원주택 대지 763㎡ 건평137㎡  
김정기1억8천만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 149㎡ 건평161㎡  
김정기1억 최저가7천만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 319㎡  
건평297㎡